

#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노동자·시민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민주노총·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생명안전행동)
- 프로그램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생명안전행동 이태의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01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규탄 및 투쟁 결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02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규탄 및 10만 서명 운동 취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혜은 소장 (생명안전행동 상임공동대표)
03	국회 차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연대 투쟁	정의당	강은미 의원
04	투쟁 결의 (생명안전행동 상임공동대표)	노동당	이백윤 대표
		녹색당	김찬휘 대표
		진보당	정태흥 공동대표
05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참석자
06	10만 서명 운동 시작 퍼포먼스		참가자 전체

## [기자회견문]

###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로, 50인(역)미만 사업장은 적용 연기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사망,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방치까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 온 윤석열 정권이 50인(역)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목숨마저도 차별받아야 하는가? 민주노총과 105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가한 생명안전행동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를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개악 저지 10만 서명 운동> 돌입을 선포한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천 45명에 달한다. 무기형, 5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국내의 안전사고 처벌 법령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에 차등을 둔 법은 없다. 전례가 없이 적용을 유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이후 3년도 모자라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다. 인천 부천 공단의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의 실명에는 노동부의 사용금지 명령에도 감독을 속이고 사용한 사업주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는 4년이 걸렸다. 화재 사고가 나도 보험금 사기에만 골몰하고, 형식적인 소방 점검만 하던 세일전자는 화재 참사로 9명이 사망했으나 대표이사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대체 언제까지 평균 벌금 500만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만 지속되어야 하는가?

올해 6월 중기 중앙회의 조사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59.2%가 법 준수 준비가 되어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3.2%에 불과했다. 작년 10월 갤럽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했다. 그러나, 경영계의 왜곡된 실태조사, 보수 경제지의 여론 호도를 등에 업고 여당은 개악 법안을 발의하고, 노동부 장관은 연기 검토를 운운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 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는 쌍끌이 전략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에게는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결국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투자, 인식 전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우리는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10만의 요구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 저지에 1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에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하라!
-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중단하라!
-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 강화하라!

2023년 10월 16일

민주노총·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 운동 계획]

#### 1. 의제와 슬로건

: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중단하라 / 50인 미만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 2. 시기와 방식

: 2023년 10월 16일(월) ~ 11월 16일(목) 온/오프라인 서명

: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진보정당 등 공동사업으로 진행

: 국회/정당 등 주요 단위에 서명지 전달 등 연계 사업

: 온라인 서명 주소 [bit.ly/중대재해처벌법개악분쇄10만서명](https://bit.ly/중대재해처벌법개악분쇄10만서명)

#### 3. 교육 선전 사업

: 이슈페이퍼, 카드뉴스, 피해 당사자 및 활동가 영상 제작 등 교육 선전 자료 제작

: 각계각층 부문 영역별 릴레이 기자회견

: 언론 기고, SNS 서명 운동 광고 등

#### 4. 서명 운동 플랫폼

: 민주노총 홈페이지 내 특별페이지 개설하여 10만 서명 운동 집계 현황 발표 예정

: 특별페이지 내 교육 선전 자료 등 게시 예정

[참고자료]

1. 50인(억) 미만 적용 연기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 법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 문제가 아님. 대기업 중대재해는 시간 끌기와 불기소 남발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 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 시켜 법을 무력화로 귀결 됨.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중소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에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 임.

2. 50인(억)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80%, 10년간 1만2천45명 사망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연도별 자료]

년도	산재사망	50인 미만	사고사망	50인 미만
2022	2,233	1,372	874	707
2021	2,080	1,359	828	670
2020	2,062	1,303	882	714
2019	2,020	1,245	855	660
2018	2,142	1,285	971	745
2017	1,957	1,148	964	736
2016	1,777	1,077	969	705
2015	1,810	1,062	955	702
2014	1,850	1,078	992	717
2013	1,929	1,116	1,090	782
계	19,860	12,045	9,380	7,138

- 정부 통계만으로도 지난 10년간 50인(억)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노동자는 12,045명. 업무상 사고 사망은 7,138명. 최근 3년 업무상 사고 사망은 전체의 80%에 달함.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판을 치는 중소기업 산재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다시 내 팽겨쳐질 위기에 직면함. 법 제정 이후 3년이 지났는데, 또 다시 연기 주장은 법 회피를 위한 억지에 불과함,

2. 안전 법령 위반 사상 사고 처벌에 적용 시기 차등 법령 국내외 사례 없어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유예나 차등 적용은 없음. 안전법령 위반 사상에 대한 처벌이 있는 국내법령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외국 법령도 차등 사례가 없음

법명	사상 사고 처벌
환경범죄단속법	무기 또는 5년 이상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무기 또는 5년 이상
연구실 안전환경법	3년 이상 10년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7년 이하 (사망 시)

-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높은 하한형을 규정한 국내 법령도 규모에 따른 적용유예나 차등 적용은 제정 초기부터 없었음.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이다. 법을 위반해서 죽거나 다쳤을 때 처벌의 문제는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의 문제라는 반증.

### 3. 적용 시기 연장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대책 전체를 포기하는 것

-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경영책임자 의무는 예방체계 구축뿐 아니라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행, 정부 행정기관의 감독 시정조치 이행, 안전보건 법령 준수, 안전교육 실시 점검 및 이행> 등도 규정.

- 법 적용이 연기되면 2016년 메탄올 중독 7명 실명 사고처럼 화학물질 관리가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부의 사용금지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함. 인성이 송두리째 무너진 피해자들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어렵게 된다.

- 법 적용이 연기되면 2018년 세일전자와 같이 2016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보험금 사기로 자기 이속만 챙기고,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한 기업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제2, 제3의 세일전자 대표이사가 나오게 됨.

- 2024년 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집중되었던 예산 지원과 중대재해 감축 대책 자체가 무력화. 대기업은 검찰이 봐주기로 버티고, 중소기업은 적용연기로 버티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화 되고, 일시적으로 반짝하던 현장의 재해예방 투자와 현장 개선도 원점으로 되돌아 가게 됨.

### 4. 쪼개기 계약, 특수고용으로 너도 나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를 적용기준으로 하면서, 제조업까지 확산 된 쪼개기 계약 이 더욱 확산,

- 원청이 50인 미만이면, 수 백명의 노동자를 특수고용으로 고용한다면 법 적용대상에서 빠져 나가게 됨.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특수고용등 노무제공자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원청에 부여한 예방 취지가 실종.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조항도 해당 되지 않아, 날로 증가하고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됨.

### 5.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가능하다 59.2%. 2개월 뒤에는 준비 못했다 80% ???

경영계 답정너 실태조사로 여론 호도

- 여당의 적용 연기 원포인트 법안 발의 직전에 보수 경제지가 집중 보도한 것은 중기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로 소규모 기업의 80%가 준비 부족으로 연기를 요구한다는 것임

- 같은 기관인 중기 중앙회의 2개월 전 조사에서는 법 준수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약 60%에 달했고, 준비가 안 되 연기가 필요하다는 사업장의 적용 시기도 1년 연기가 41.2%로 가장 많았음

[중기 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2023년]

구분	6월 조사	8월 조사
법 준비	법 준수 가능 59.2 % 전혀 불가능 3.2 %	준비하지 못했다 80% 아무 준비 못했다 29.7%
적용시기	법 준수 가능 제외 1년 연기 41.2%	연기 필요하다 85.9%
조사대상	제조,비 제조 각 50% 수도권, 전국 각 50%	제조업 93%
응답자		대표이사 41% 임원 23%

- 같은 기관의 널 뛰는 조사 결과는 조사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임. 8월 조사는 93%가 제조업이었고, 응답자의 41%는 대표이사, 23%는 임원이었다. <답정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업이 소유주인 보수 경제지, 언론을 통해 <적용 시기 연장 대세론>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것임.

- 경총은 정부에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서에서 <위험성 평가 처벌 조항 도입 시기인 2년 뒤 적용>을 요구. 그러나 정작 위험성 평가 처벌 조항 도입은 반대하는 앞뒤 안 맞는 궤변을 주장.

## 6. 노동자, 시민, 전문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필요하다. 각종 여론조사 중소기업 80%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 경영계와 보수 언론의 중대재해처벌법 때리기, 무용론 언론 공세에도 노동자 시민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월등히 높음.

- 2022년 9월 국회의장실과 헤럴드 경제 조사에서도 법을 강화해야 한다 53.9%, 완화해야 한다는 17.6%에 불과함. 2023년 한국 비정규 센터 조사에서도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82.2%, 처벌 수위 완화 반대가 72.5%임. 중대재해 전문가 넷에서 안전보건 전문가 612명 대상조사에서는 현행 법 처벌이 부족하다가 47.4%, 5인미만 사업장 적용에는 77.1%, 중대시민재해 대상 확대에 81.4%가 찬성.

- 2022년 10월 한국 갤럽이 중소기업 1,000곳 대상 조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찬성이 80%였고, 찬성 이유로는 하청에 책임 떠 넘기는 행위 방지가 가장 높았음

## [붙임] 오프라인 서명 운동지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 운동

### 1.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이 11월 국회부터 시작됩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이 본격화됩니다.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이 좌절되자 2024년 1월 27일로 명시된 <50인(억)미만 적용 연기>원 포인트 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총선을 앞둔 11월-12월 국회에서 정치적 거래에 나섰습니다.

### 2.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전체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목숨까지 차별받을 일은 아닙니다. 안전법령 위반 사상사고에 대한 처벌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법령은 국내도, 외국에도 없습니다.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경영 책임자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 법 제정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작은 사업장 예방체계 구축에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시 연장하면 <재해 발생 이후 예방대책 수립, 행정기관의 시정 권고 이행, 법령 준수 및 안전교육> 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도 적용 제외 됩니다.

○ 사업장 숫자로는 98%, 종사자 숫자로는 52%인 50인(억) 미만 현장에서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합니다. 적용 연기는 더 많은 사업장, 더 위험한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 대형 로펌의 법 기술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기소로 대기업은 빠져나가고, 작은 사업장은 적용 연기로 빼들려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완성 시키게 됩니다.

### 3. 법 제정에 나섰던 10만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개악을 저지하고 무력화를 파탄 냅시다.

죽고 또 죽는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경영책임자의 범죄행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법 제정 요구, 피해자 유족과 국회 안팎의 단식과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50인 미만 적용 시기 연장을 앞세워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하는 개악 추진 이제 다시 10만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민주노총 ·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 50인(억) 적용 연기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중단하라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사망,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방치까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 팽개쳐 온 윤석열 정권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원포인트 법안 발의와 정치적 거래>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첫째,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차별하는 것으로, 국내외 전례가 없는 법 개악이다.

둘째, 예방체계 구축, 재해발생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행정기관 감독 시정조치 이행, 법령 준수, 안전교육 실시> 등 중대재해 감축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셋째, 대기업, 지자체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불 기소를 남 하더니,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 연장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째로 무력화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 확대 강화하라

연번	소속	이름	주소(읍, 면, 동까지만)	서명
1				
2				
3				
4				
5				
6				
7				
8				
9				
10				